

한국출신 '전범' 일본상대 소송

1991. 10. 26

역3천만에 배상청구

【연합】 2차대전중 일본군 징용돼 연합군 포로 감시원으로 종사하다 전쟁이 끝나자 C급 전범으로 몰려 장기형을 치렀거나 사형을 당했던 한인 출신 군속 및 유가족 6명은 오는 11월12일 도쿄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소송을 준비중인 사람은 '한국출신 전범자동진회' 회장 문태복(68·도쿄 거주)씨 등 일본군속 출신 5명과 유족 1명 등 6명으로 이들은 이마무라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다.

전범으로 간주된 한국인 출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2년간 계약으로 일본 정부에 징용당했으나 계약기간이 지나도 귀국시키지 않는 바람에 전쟁이 끝난 직후 부당하게 전범으로 몰려 갖은 곤욕을 치르거나 죽음을 당했다"고 지적하고 "연합군으로부터 풀려난 뒤에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당시 문씨는 타이-미안마간 철도 부설공사에, 다른 5명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포로 감시 업무 등에 종사했으나 전쟁이 끝나자 연합군에 불합격 포로 학대죄로 8~20년의 징역형과 사형 등을 선고받았었다.

韓人출신 日전범 6명
1億3千萬엔 損害請求

【東京】 2차대전중 일본군 징용돼 연합군 포로 감시원으로 종사하다 전쟁이 끝나자 C급 전범으로 몰려 장기형을 치렀거나 사형을 당했던 한인 출신 군속 및 유가족 6명은 오는 11월12일 도쿄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文씨 등은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한국에서 징용된 후 일본에 거주하는 前 전범 6명과 유가족 1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文씨 등은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한국에서 징용된 후 일본에 거주하는 前 전범 6명과 유가족 1명이다.